

“정부·자본, 조선소 노동자 죽음 방관”

조선소 중대재해 기획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하청 다단계, 죽음 주요 원인”

조선소 노동자들이 2024년 들어서도 조선소에서 무용지물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 기획 근로감독과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 등 정부의 특별 대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3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조선소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기획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조선소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일한다”라며 “노동부가 당장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한화오션 경영자들이 말로만 안전을 외칠 때 1월에만 두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라며 “옥포조선소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데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연이은 조선소 중대재해 주요 원인은 다단계 하청구조다”라면서 “조선산업 인력과 생산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내하청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전쟁 중이 아닌 한국에서 한 해 죽는 노동자 수가 2천 명이다”라며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전 조선소 기획 근로감독, 원인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경영책임자 구속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청노조 포함 노사정 TF가 근로감독 결과 이행점검 ▲산재 근본 원인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로감독, 원인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경영책임자 구속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청노조 포함 노사정 TF가 근로감독 결과 이행점검 ▲산재 근본 원인 다단계 하청고용 금지 등을 요구했다.

